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9년 2월16일(월)
통권28호(제2권 제6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의 산업 SOC - 도로

북한의 도로 시설 현황에 대해

북한의 도로는 주요 철도역이나 항구 등과 근거리를 잇는 연결교통으로서 보조 수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철도나 수운망이 없는 지역에 한해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는 북한의 험준한 지형적 여건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말미암은 벌크화물의 육상수송계약, 그리고 주민의 자유여행이 금지된 상황에서 자유이동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 교통을 기피하는 체제상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밖에도 수입제한 석유를 소모해야하는 자동차교통의 특성이 북한의 자력갱생원칙에 반한다는 인식 등도 도로의 발달을 저해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도로연장은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1970년 기준 20,000km에서 2003년 24,879km로 33년 동안 24%가 증가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도로건설이 저조한데는 위에서 설명한 원인과 함께 북한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시설의 확충을 등한시함으로써 전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부족하고 기존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남북한의 도로 연장 추이 (단위 : km)

연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북한연장	21,000	21,735	23,000	23,339	23,633	23,963	24,449	24,879
남한연장	46,951	52,264	56,715	74,237	88,775	91,369	96,087	97,253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북한의 도로 현황

북한의 주요 도로현황을 보면 우선 고속도로 7개 노선이 있다. 주요 고속도로는 평양~순안 국제비행장간 15km, 평양~남포간 44km, 평양~원산간 189km, 원산~금강산간 114km, 평양~개성간 170km, 평양~향산간 120km, 사리원~신천간 30km 등 총 7개 구간 682km가 있다. 이들 고속도로는 평양~개성, 평양~향산간 고속도로만 아스팔트 포장이면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크게 동해안축, 동서연결축, 서해안축, 북부국경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주요 간선도로는 대개 철도와 병행하여 발달되어 있고, 주요 지역을 고속도로 내지는 12급 도로로 연결해 주고 있다. 이 주간선도로 사이를 각급 도로가 연결하고 있다.

간선도로 중 서해안축인 평양~신의주간 도로는 약 228.8km

에 달하며, 북한의 중심적 교통축으로 대중국 국경도로의 기능을 겸하는 도로이다. 원산~나진간 도로는 동해안축으로 원산, 함흥, 청진을 경유하여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660km에 달하는 동해안의 중추 도로로서 경제,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도로이다. 압록강을 따라 신의주~고무산간을 연결하는 북부국경축은 동서부를 연결해주는 도로로서 산악지대의 견제와 국경지역의 연계 기능이 강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노선 도로와 동서간을 연결하는 횡단도로망 등은 모두 평양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1개 지점, 중국과는 6개 지점에서 교량이 연결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 수송능력

북한의 도로망은 지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북부는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부에는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어 도로망은 동서 양안 따라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낭림산맥은 동고서저의 유형을 띠고 있어 동서간의 관통도로가 적고 대부분의 도로는 계곡이나 하천을 따라 발달했으며, 이들 도로에는 교량과 터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 도로는 협소하고 기울기가 심하여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많다.

도로의 수송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의 하나가 낮은 도로 포장율인데 북한에서는 대도시인 평양, 남포, 원산 등의 주변을 지나는 도로만 포장되어 있다. 한편 이들 도로는 철도노선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화물수송을 위한 자동차의 수송망은 발달하지 못해 도로별 수송능력은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정상적인 차량 이동 또는 최대의 차량 이동을 담당할 수 있는 수송능력 판단의 요소로는 도로 상태, 도로의 폭, 최소 곡선반경, 기울기, 지층상태 등이 고려된다.

도로 수송능력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요소들은 그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도로능력이란 선정된 도로상에서 계속 일정한 시간에 어느 정도의 교통량을 한 방향으로 수송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점을 규정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도의 경우 차선당 시간당 일방향 수송능력을 약 1,500대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국도의 수송능력과 비교할 때 북한 도로의 수송능력은 아주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한국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저 『新북한의 산업(2005년)』 중 발췌.)

▶제28호 목 차

이주의 칼럼

점점 멀어지는 금강산 -----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김정일 후계자 상속 목록에 ‘비료 증산’ ----- 3

美 ‘북한전문가들’ 평양에 간 까닭은? ----- 4

NLL인근 종적감촌 중국어선... ‘제3연평해전’가능성? ----- 5

北 휴대폰 6000명 등록, 누가 가입했을까? ----- 6

“부산물비료 지원시 남북에 윈-윈”<전문가> ----- 7

北신문 “조평통 성명은 北당국 공식 대변” ----- 8

정부 ‘비핵·개방·3000’ 용어 슬그머니 내렸다 ----- 9

6자회담 美수석대표는 보즈워스 전 대사 ----- 10

North Korea back to brinkmanship ----- 11

強盛大國建設「孫の代にでも」= 北朝鮮紙が3代目世襲示唆か ----- 11

추천논문 / 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2

남북한 통일달력 드립니다

(주)겨레사랑에서 2009년 남북한 통일달력(탁상용)을 만들었습니다.
「주간 북한경제 동향」 독자님들 중 달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master@dprkinvest.org)로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주의 칼럼

점점 멀어지는 금강산

김석(산업부 차장)

2년 전 5월이다. 금강산관광 코스가 내금강까지 늘어나는 것을 앞두고 시범관광에 동행했을 때 일이다. 현대아산의 한 간부직원과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금강산호텔의 식당에 갔는데 스물둘을 갓 넘긴 젊은 북측 아가씨가 음식을 날라줬다. 북측 젊은이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봤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결혼 상대방으로 남측 젊은이는 어떤지 등등이었다.

같이 식사하던 현대아산 직원은 걱정됐는지 실례가 되지 않는지를 물었으나 아가씨는 “괜찮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 물어보는데요, 뭘”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힘을 얻고 몇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대화를 하면서 참 밝고 활기찬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평소 보던 남측의 젊은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현대아산 직원에게 “다른 사람들이 거의 가볼 기회가 없는 북에 자주 다닐 수 있어서 좋겠다”고 물어봤다. 그 직원은 “북에 자주 다니는 것이 좋을 건 없지만, 통일이 됐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국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매우 큰 표정이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힘을 잃었다. 금강산관광은 중단된 지 반년이 지났고, 개성관광마저 막히면서 회사의 존립마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아산은 한때 1084명에 이르던 인력 가운데 605명을 줄였고, 남아있는 479명 중

에서도 120여명은 임금의 70%만 받으면서 집에서 일하고 있다. 그도 언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처지다. 통일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물론 금강산관광 중단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응분의 사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금강산관광은 가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서나, 남북관계를 위해서나 하루 빨리 재개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그룹 출신이다. 현대그룹 사람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다. 현대그룹의 한 계열사 사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이던 당시 장점을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몇년 동안 모셔왔는데, 부하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본인 생각과 다르더라도 항상 끝까지 들은 다음 자신의 얘기를 했다”고. 이 대통령에 이어 현대건설 사장을 맡은 김윤규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회장은 대선 직후 “남북경협 필요성을 잘 아실 것이기에 한 차원 높게 대북경협 사업을 이끄실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허물어지는 느낌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도,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틀마저 없어진다면 금강산은 더욱 멀어진다. 그 전에 정부가 빨리 나서야 한다. (이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91826155&code=990505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정월대보름 “풍년·건강 기원”

-- 2월 10일 연합뉴스

정월 대보름인 9일 북한 주민들은 전통음식을 만들어 먹고 각종 민속놀이를 즐기며 흥겨운 명절을 보냈다.

북한은 설, 추석과 함께 정월 대보름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곳곳에 자리 잡은 민속놀이장에서 “학생 소년들이 민속놀이와 다채로운 유희오락을 즐겼다”고 전했다.

민속놀이장에서는 많은 어린이가 줄넘기와 팽이치기, 딱지치기, 롤러 스케이트 등을 즐겼으며, 썰매에 등근 바퀴가 달린 ‘로라 썰매’를 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평양 선교민족식당 책임자 송춘옥 씨는 중앙TV와 인터뷰에서 오곡밥과 아홉 가지 마른나물 음식들을 비롯해 평양의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평양송어국, 녹두지짐 등 여러 음식과 당과류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대보름의 다양한 풍습과 명절 음식을 소개했다.

중앙방송은 “우리 민족이 정월 대보름을 큰 민속명절로 쇠은 것은 삼국시기부터”라며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과 약밥, 마른나물 9가지로 만든 반찬, 엿, 부럼깨기(깨기), 국수” 등을 만들어 먹으며, 찰밥에 꿀과 참기름, 밤, 대추, 잣을 넣어 만든 약밥도 대표적인 명절 음식이라고 전했다.

방송은 또 “대보름날 아침에 마른 나물로 반찬을 해먹으면 그 해에 앓지 않는다고 해서 검정색 나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묵은 나물을 볶거나 무쳐서 먹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며, 부럼깨기는 “대보름날 첫 새벽에 날밤, 호두, 잣 같은 것을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으며 이빨이 튼튼해진다는 데로부터 유래”했다고 소개했다.

北김정일 후계자 상속 목록에 ‘비료 증산’

-- 2월 10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남한의 식량 및 비료 지원 중단에 단단히 턴 탓일까, 연일 비료 증산을 강조하는 행보를 했다.

그는 7일 북한 최대 비료공장인 함경남도 흥남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를 찾아 “식량문제를 풀자면 농촌에 비료를 많이 보내줘야 한다”며 비료증산을 독려하고 곧바로 8일 평북 락원기계연합기업소로 가서 흥남비료공장에 필요한 설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북한은 지난해 모처럼 풍수해를 면해 수년간 이어진 풍수해로 인한 흉작을 뛰어넘는 ‘풍작’을 이루긴 했지만, 실제론 평년작에 불과했다.

남한이 10년 가까이 해오던 수십만의 식량과 비료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북한의 식량위기는 여전했고, 그 위기는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북한은 남한에 의존하던 지원의 중단시 맛을 체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료산업 연관 공장들을 잇따라 시찰하며 강조한 것은 “새로운” 석탄 가스화 공정의 도입을 통한 비료 증산.

석탄 가스화 공정이란 석탄을 고온에서 가스화해 발생하는 수소를 공기중 질소와 결합시켜 암모니아를 합성, 비료를 생산하는 공법으로, 남한에서 사용하는 나프타 가스화 공법에 비해 낙후한 기술이지만 석유나 나프타를 대량수입하기 어려운 북한의 처지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을 이용하자는 전략이다.

국내 굴지의 비료공장 관계자는 10일 나프타 가스화 공법과 석탄 가스화 공법을 각각 휘발유차와 목탄차에 비유하면서 “아마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석탄 가스화 공정을 도입해 암모니아를 생산, 요소비료를 생산하려는 게 아닌가” 추정했다.

비록 세계 수준에 비해 낙후하긴 했지만 석탄 가스화 공정을 대대적으로 도입해 비료와 식량의 증산을 꾀하는 해법은 노력동원과 거름 증산 ‘전투’에만 의존하는 전략에 비해선 성과를 예상할 수 있는 농업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美국방부, 구매 관련 對北제재 해제

-- 2월 11일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월21일 물품구매 관련 대북제재를 해제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작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달 21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테러지원국가나 단체가 소유·통제하는 회사와는 구매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방부의 연방구매세칙(DFARS)에서 북한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소유하거나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회사들로부터도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 국가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4개국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가 북한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해제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美 ‘북한전문가들’ 평양에 간 까닭은?

-- 2월 12일 노컷뉴스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전·현직 관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탐색전을 펴고 있다.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 등 미국의 북한 전문가 7명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아시아협회 특별연구원이 이끄는 북한 전문가들이 지난 주말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소식통이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 방문단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북한전국위원회(NCNK)의 캐린 리 사무총장과 비정부 구호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고 말했으나 방북의 일정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수전 셔크 연구원이 비정부 차원의 협의 기구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의 창설자 겸 대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평양에서 여러 북한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는 또 미 국무부 관리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영국 의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캐롤라인 콕스 상원의원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자신이 평양에 있을 때 수명의 미국 국무부 관리들을 만났으며, 이들이 미국이 북한에서 벌이는 식량 지원을 포함한 중요한 인도적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의 관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연관된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무부의 관리가 현재 북한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핵 군축 전문가인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이끄는 일행과 리언 시걸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이 주도하는 방북단이 이달 안으로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긴장에도 외국인 북한 관광 차질 없어

-- 2월 12일 노컷뉴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북한 관광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북경에 본부를 두고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 여행사의 사이먼 카커럴 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올해 첫 북한 관광을 신청한 외국인의 수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오는 14일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14명이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커럴 지국장은 “이번에 북한을 찾는 관광객은 모두 유럽 국가 출신으로 영국과 호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설명했다.

카커럴 지국장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남북 간의 갈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이 북한을 여행하는 데는 장소와 일정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려여행사 측은 아리랑 공연이 예년처럼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열린다면서 북한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벌써 홍보에 들어갔다.

한편 북한 당국은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함경북도 칠보산과 주변 지역, 청진의 해변과 황해남도 해주시 등 새로운 관광지를 확대해 개방했다.

평양에 한국기업이 경영하는 호텔 있을까

-- 2월 12일 노컷뉴스

북한에는 현재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30개 안팎의 호텔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있는 양각도호텔이나 고려호텔 등은 국제수준의 호텔로 북한이 대내외에 자랑하고 있다. 그럼 평양에도 한국 기업이 경영하는 호텔이 있을까?

북한 평양에 한국기업이 경영하는 호텔이 한 군데 있다. 바로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동 보통강 강변에 있는 보통강 호텔이다. 지난 1973년에 문을 연 보통강호텔(사장 박상권)은 1991년부터 통일교 계열의 평화그룹이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보통강려관 관리국과 합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통강호텔은 9층으로 된 1급 호텔로, 특 등실 1개와 1등실 14개실 등 모두 180개의 객실과 대형연회장, 일본식 레스토랑, 탁구장, 당구장, 노래방 등의 부대시설과 스크린 골프장(북한에서 자체제작한 프로그램 사용)도 갖추고 있다. 종업원은 600명 정도로 알려졌다.

보통강호텔에서 지낸 외국인과 남쪽 방북단들은 우선 호텔이 편안하고 음식이 입에 맞다고 말한다. 이 호텔에서는 평양에서 유일하게 일본인 주방장이 일식과 양식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은, 평양에서는 이곳에서만 미국의 CNN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즐겨 찾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최근 평양을 방문한 보스워스 전 주한대사 등 외국의 주요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보통강호텔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이 이 호텔에 투숙했다.

특히 영국의 대동신용은행(DCB)과 북한에 이동통신 사업을 투자한 이집트의 오라스콤(Orascom)회사 등 외국기업들이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NLL인근 종적감춘 중국어선... '제3연평해전' 가능성?

-- 2월 12일 헤럴드경제

북한의 연이은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관련 강경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 5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한꺼번에 모두 자취를 감춰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때도 남북 충돌을 며칠 앞두고 중국 어선들이 동시에 사라진 적이 있어 자칫하면 '제3연평해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돌고 있다.

11일 해양경찰청과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앞바다에서 선단을 구성해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지난달 말께부터 줄기 시작, 지난 4일 오후부터 단 한척도 없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물론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말까지가 휴어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평소에는 휴어기 없이 계속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단 한척의 배도 남지 않았다는 점은 '이상징후'로 파악되고 있다.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 부대 관계자는 "며칠 전부터 중국 어선이 단 한척도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평소와 다른 상황이라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합참의 지시 아래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서해 5도의 주민들은 1999년과 2002년에 있던 두차례의 연평해전을 떠올리며 '혹시나'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고 있다. 연평도 주민 노명성씨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북한이 중국에 '교전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피해라'고 통보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에도 중국 어선이 사라져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바로 교전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美위성, 北미사일 발사 움직임 포착”<CNN>

-- 2월 12일 연합뉴스

북한의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로 보이는 활동이 미군 첩보위성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1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CNN은 한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던 장소에서 원격 측정설비를 조립하는 모습이 며칠 전에 촬영됐다고 전했다.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은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되는 미사일을 감시하는데 쓰이는 원격 측정장치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 필수적인 설비이며, 2006년 미사일 발사 직전에도 설비 조립 활동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관리는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장으로 옮겼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장으로 옮긴다면 우려할 만한 사항이 되고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MD) 기지가 비상 태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4천km 정도로 예상되며 알래스카도 공격권에 들지만 2006년 실험 때는 약 40초간 비행한 뒤 파괴됐다.

한·미, 큰 틀의 '대북 원칙' 도출할 듯

-- 2월 12일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내주 방한을 계기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문제를 풀기 위한 큰 틀의 원칙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통화와 다양한 물밑접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율해 온 북한문제 대응책을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한·미의 이런 움직임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몇 주간 북한의 태도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안다"면서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사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클린턴 장관의 이번 동북아 순방에서 북한문제가 주요 관심사중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문제가 한미동맹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외교장관 간의 첫 만남이니만큼 북한문제에 대한 큰 원칙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北 인민무력부장에 김영춘

-- 2월 12일 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장은 11일 김영춘(73)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남한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와 중앙군사위 공동 명의의 '결정'에서 "조선 인민군 차수 김영춘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전까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는 것은 확인됐고 김 주석 사망 이후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했을 것으로 추측됐으나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서 또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인민무력부가 국방위원회의 산하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춘 신임 인민무력부장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왔으며 작전

국장과 군수동원총국장, 6군단장을 거쳐 1995년 북한군 최고의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총참모장(1998.10-2007.4)을 거쳐 2007년 4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작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열병 보고를 하기도 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날 또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장에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을 임명했다.

리 총참모장은 남한의 수도방어사령관 격인 평양방어사령관이었던 것 이외에 구체적인 경력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7년 북한군 창설 75주년 열병식에서 열병지휘관을 맡기도 해 베일에 가려졌었지만 비중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

“北, 대포동2호 위성운반체로 실험할 수도”

-- 2월 12일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를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포동 2호를 군사용 미사일이 아닌 위성운반체로 발사실험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가가 밝혔다.

위성발사체와,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위성을 탑재했으나 여부와 비행체도 등만 다를 뿐 발사준비과정 및 발사 후 비행과정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발사라고 주장할 경우 북한은 지난 2006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기술력은 기술력대로 과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98년에도 사거리 2천500km 상당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뒤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일 이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를 통해 ‘오미디’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리자 ‘평화적인 우주이용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논평을 통해 이란의 입장을 두둔한 것은 물론 이란처럼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뒤 ‘위성운반체 실험’으로 강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온라인 군사전문매체인 ‘글로벌시큐리티’의 찰스 빅 선임기술연구원은 지난 1월26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개발 업데이트’라는 글에서 “북한이 올해 봄이나 여름에 위성운반체 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1~2개의 대포동 2호를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北 체제유지 위해 과거 회귀 징후”

-- 2월 12일 연합뉴스

러시아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국민대 교수)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체제유지를 위해 과거 스탈린식 통치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박사는 이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북한에서 김정일 주석 사후에 스탈린식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밑으로부터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최근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 정권은 일부 시도됐던 변화를 되돌리고 사회에 대한 통제를 재강화 하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만일 잘 사는 남한이 없었다면 북한은 이미 지난 1970년대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앞서 개혁·개방을 이뤘을 수도 있으나, 현재의 북한 정권을 두고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같은 의미 있는 개혁·개방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슬픈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빠지고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면 사정이 나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집단지도체제는 오히려 체제내 불협화음을 가져와 북한사회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北 휴대폰 6000명 등록, 누가 가입했을까?

-- 2월 12일 헤럴드경제

북한이 평양에서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지 2주만에 가입자 6000명을 모집하는 등 북한 내 이동전화 사업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영국에 있는 무선 시장 조사업체인 와이어리스페더레이션에 따르면 북한 3G 통신사인 ‘고려링크(Koryolink)’에 등록된 가입자가 서비스를 개시한 1월부터 2주 동안 6000명에 달했다. 고려링크는 북한에서 이동통신사업 독점권을 획득한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텔레콤이 지분을 75%를 확보해 북한 체신 및 통신사(Korea Post Telecoms Corporation)와 합자한 회사다.

나기브 사위리스(Naguib Sawiris) 오라스콤 회장은 IDG 뉴스 서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가입자가 일반시민이며, 특권계급이나 군부 장성급, 당의 상층부가 아닌 점”이라며 “처음으로 이들이 점포에 가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 단말기에 높은 세금을 매겨 단말기 가격이 600달러에 육박하는 점은 대중화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오라스콤은 가입자 기반으로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감세 관련 교섭을 진행 중이다.

오라스콤 텔레콤의 판매점은 현재 평양에 1개뿐이지만

판매망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3년간 북한에 4억 달러를 투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라스콤은 초기 단계에서 평양시내 15만명 가입자를 모집해 가입자당 연평균 12~15달러 수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고려링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는 중국 화웨이 제품을 북한 전용으로 만든 저사양 컬러폰이며 과세 후 가격은 400~6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력시위 향해 한 발짝씩...美, 항모 파견 검토

-- 2월 12일 헤럴드경제

‘북한의 오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이 점차 노골화하자 미국이 일단 구두경고는 물론 태평양 함대의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력의 이동을 포함한 조치를 구사해 강력하게 예봉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2일(한국시간)에도 “북한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핵 6자회담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9일 태평양의 미 전함을 북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로 시동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의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로 요격하고 2차적으로는 본토의 반덴버그 기지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로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도발행위 발생 직후 북한의 주요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

미국 이처럼 대북 응징태세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과 북미 체제바 함의를 위반한 채 조금씩 조금씩 호전성을 노골화할 경우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처럼 북한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광기의 싹’을 미리 없애버리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남도, 내달 평양서 ‘교류사업’ 논의

-- 2월 5일 한겨레신문

경남도 방북단이 내달중 평양을 방문, 올해 도와 북측 간 교류협력사업 내용을 협의한다.

도는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되는 방북단이 내달 11일부터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해 올해 양측이 추진할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합의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아직 통일부에 정식 방북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부지사급을 단장으로 한 실무방문은 문제가 없다는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방문단에는 도의원과 통일농업운동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 간부

진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올해 협력사업은 평양 외곽에 거창사과 등 과수농장 조성 확대, 평양시내 삼석구역 삼석농장내 채소 비닐하우스 설치, 통일딸기 모종 사업 등이다.

한편 도는 2007년과 2008년초 부지사나 과장급을 단장으로 실무방문단을 평양에 보내 한 해 사업을 협의해왔으나 지난해 7월중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민대표단 방북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 추진단계에서 좌절되기도 했다.

중국 북핵대사 교체, 양허우란 임명

-- 2월 13일 중앙일보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는 ‘북핵 전담 대사’를 최근 교체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이날 “신임 조선반도 사무대사(한반도 북핵 전담 대사)인 양허우란(楊厚蘭·사진)이 조만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6자회담 동북아 평화와 안보 체제 실무 그룹 제3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북핵 전담대사의 교체 사실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양 신임 대사는 2007년 3월 이후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로 일해왔다. 그는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부대사와 공사참사로 일한 ‘한국통’이다.

중국 정부가 북핵 전담 대사를 교체한 것은 2007년 4월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노르웨이 대사를 지낸 천나이청(陳乃淸·여·56·사진)이 최근 까지 맡아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 특사를 사실상 내정한 상황에서 중국도 북핵 대사를 교체한 데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핵 전담대사는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차관)을 보좌하며 당사국의 일정과 의견을 조율하는 6자회담의 실무책임자다. 그동안 낭푸쿠이(寧賦魁)와 리빈(李濱) 전 주한 중국 대사가 각각 북핵 전담대사를 맡았을 정도로 비중이 큰 자리다.

“부산물비료 지원시 남북에 윈-윈”<전문가>

-- 2월 13일 연합뉴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지는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한 부산물비료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북한 농지의 지력을 높여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남한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남북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립대 이용범 교수가 제안했다.

이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가 ‘월드비전 북한농업협력사업 향후 10년’이라는 주제로 여는 세미나에 앞서 배포

한 자료에서 “북한의 비료 사용량이 1989년 65만톤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현재 실제 공급량은 필요량의 40-50%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부족한 화학비료를 대신하기 위해 각종 유기물을 이용한 비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농업 부산물의 농경지로의 환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에너지 부족으로 산림이 남벌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농경지에 유기물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비료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남한에서 과잉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부산물비료를 제조해 북한의 토양유기물 부족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한에서는 각종 산업에서 다양한 유기성 부산물이 생산되며 특히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지만, 수협과 해양 심층수 사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현재는 정부의 묵인 아래 가축분뇨가 동해 등에 대량 투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부산물비료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정부에 부산물 비료의 대북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부산물 비료를 거부하고 화학비료 지원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 토양학자들이 공동으로 부산물 비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다면 부산물 비료의 대북 지원을 통한 북한 지력 증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인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북한에 비료 1톤을 지원할 경우 곡물 2톤을 증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남한이 북한에 매년 30만-35만톤의 비료를 지원할 경우 연간 60-70만톤의 식량증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13합의’ 2주년…北 비핵화는 ‘오리무중’

-- 2월 13일 노컷뉴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긴 동면기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명시한 ‘2.13합의’가 13일로 체결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북핵 6자회담은 검증의 벽에 부딪혀 비핵화 2단계 마무리는 기약조차 없이 미뤄지고만 있다.

지난 2007년 6자회담에서 마련된 ‘2.13합의’는 북한 비핵화의 청사진을 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초기 이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요약하면 북한은 핵시설 폐쇄 봉인(1단계)과 불능화 및 신고(2단계)를 이행하고 나머지 5개국은 중유 100만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13합의에 따른 2단계 마무리 시점은 당초 2007년 연말까지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해 7월에 수석대표회담에서 2008년 10월로 시한을 늘려 잡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간이 지체되곤 있지만 2단계 마무리 일정은 지금도 진행형이긴 하다. 북한은 약속했던 불능화 조치 11가지 중에서 8가지를 완료했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만 남겨두고 있다.

이 가운데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인출하는 작업은 총 8천 개의 연료봉 중 6천여 개가 제거됐고 현재도 하루 15개의 속도로 인출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는 인출작업이 완료되면 간단한 작업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사용전 연료봉 처리문제도 최근 정부 실사단이 방북, 협의를 시작했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제공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중유 지원도 약속했던 100만t 중에서 70만t 정도가 제공됐다. 한국과 중국이 각 5만t 안팎, 일본이 20만t을 남겨두고 있다

北신문 “조평통 성명은 北당국 공식 대변”

-- 2월 13일 연합뉴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북관계 문제에서 북한을 “공식대변하는 기관”이고 그 성명은 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므로 최근 조평통의 ‘무효화’ 성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13일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이 신문은 ‘성명의 무게를 결코 약화시킬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평통 성명에 대해 남한 정부가 ‘대북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라거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성명 한장으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을 거론, 이같이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조평통 성명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법적 선언”이므로 “누구도 그에 대해 흥정할 수 없다”며 “법적 성격의 문건은 한번 채택되면 그만이다. 거기에 흐지부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남조선 당국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평통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말했으나 남한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북간 합의는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 ‘비핵·개방·3000’ 용어 슬그머니 내렸다

-- 2월 14일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비핵·개방·3000’이라는 단어를 슬그머니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북측이 ‘정치적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용어만 숨기는 모양새다.

주도적 입안자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2일 취임식에서 ‘통일정책 추진의 6가지 원칙’을 밝히면서 ‘비핵·개방·3000’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아, “‘비핵·개방·3000’은 상생·공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도 좋다. 상생·공영을 주로 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핵·개방·3000’은 완성본이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 내용을 담아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개방·3000’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는데, 비핵화만 부각되는 것 같다. (대북정책의) 단어 나 형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북한 비핵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비핵·개방·3000’의 기초는 고수한다는 뜻이다. 골격은 유지한 채 ‘포장’만 바꾸려는 양상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말만 바꾼다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클린턴 “北核 완전포기시 정상화 용의”

-- 2월 14일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계속된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관련해서는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클린턴 장관은 경고했다.

클린턴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다음 주 한·중·일 3국과 인도네시아 등 4개국 방문을 앞두고 이날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와 다른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 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의 안정 최대 위협을 북한 핵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한국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지지하며 나는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킬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가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종전의 핵무기비확산조약 체결 상태로 복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발언에 대해 “어떤 도발 행동과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공세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해 북한의 대남 공세가 북한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했다.

개성공단 내 범죄발생시 재판은?

-- 2월 14일 헤럴드경제

개성공단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은 어디서 받게 될까? 남북 관계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안정 장치는 있을까?

2003년 6월 착공 이래 2009년 2월 현재 입주 기업이 97개, 북한 근로자가 3만8000여명에 이르는 등 규모가 부쩍 확대된 개성공단. 하지만 ‘남한법’과 ‘북한법’, 그리고 ‘남북합의서’가 혼재돼 적용되는 특수지역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법제 인프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또는 향후 입주 예정 기업들은 생소한 북한법제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인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이에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간담회 등의 법률지원사업을 시행,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책자’의 발간 요청을 받고,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로는 최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손실 만회를 위해 사전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꼽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수출입은행과 ‘남북경협보협계약’을 체결해 두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대북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합의에 따라 북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남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남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또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과 주민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소유할 수 없지만 50년의 이용기간이 보장되는 토지이용권을 보유할 수 있고, 토지이용권을 보유한 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밖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자금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개성공단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북한 인구 2,405만 명

-- 2월 15일 연합뉴스

북한의 총인구가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2천4백5만1천 218명이라고,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밝혔다.

유엔인구활동기금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전역의 588만 7천767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인구 조사에서, 북한의 인구는 군(軍) 시설 거주자 70만 2천373명을 포함해 모두 2천4백5만 1천218명으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지역별 인구는 평안남도가 405만 1천706명으로 가장 많고, 평양시가 325만 5천388명, 함경남도가 306만 6천 141명, 평안북도가 272만 8천6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1천172만 2천403명, 여성이 1천232만 8천815명으로, 여성이 60만 명가량 더 많았다.

“北, 클린턴 순방 주시... 대화나 대결이나 가릴 것”

-- 2월 15일 경향신문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4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대해 “조선(북한)은 대화와 대결을 가리는 척도를 가지고 첫 아시아 외교의 성패를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행각과 조선반도 정세’라는 글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언론들은 북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떠들었다”면서 “미군과 남조선(남한)군이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무력증강이 다그쳐지고 호전세력은 ‘북의 급변사태’와 ‘선제공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반목과 대립은 위험수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태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경고하는 교전상대방(북)의 의도를 해석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정

책조율 과정에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오늘 생일...北 주민들 이틀간 ‘휴무’

-- 2월 16일 노컷뉴스

1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7회 생일을 맞아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김정일화 축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날부터 이틀동안 휴무를 갖는 등 축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67회 생일을 맞아 평양 시내 거리와 다리, 마을 등지에서 꽃장식과 불장식(네온사인)을 하고 거리 곳곳에는 축한 현수막이 걸려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제13차 김정일화 축전에는 각계에서 출품한 다양한 김정일화가 선보이고 있으며, 제18차 백두산상 국제회거(피겨)축전에 출전하기 위해 프랑스와 러시아 등 각국 선수들이 속속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이날부터 이틀동안 쉬게 되며 초등학교 재학생들에게는 과자와 사탕 등 갖가지 선물이 전달되고, 평양시내에서는 특색있는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시내 곳곳에는 군밤, 군고구마, 땅콩, 솜사탕매대 등 야외매대에서도 명절 봉사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6자회담 美수석대표는 보즈워스 전 대사

-- 2월 16일 노컷뉴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 이어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미국이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대북특사이자 6자회담 수석대표로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를 임명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보즈워스 전 대사가 대북특사와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 국무부가 며칠 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즈워스 전 대사가 대북특사를 맡을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6자회담 수석대표는 다른 인물이 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소식통은 또 “보즈워스 전 대사는 한반도문제에 관심이 높고 북한과의 협상경험도 많은 베테랑 외교관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로도 적임”이라며 “70세의 고령이기는 하지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외무성과 군부, 무역성 고위인사들과 협의를 가진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주한미대사(1997~2000)에 앞서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진된 대북경수로 사업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이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초대 사무총장(1995~1997)을 지낸 바 있다.

현재는 미국 터프츠대학의 법학 및 외교전문대학원인 플래처스쿨 학장을 맡고 있다.

North Korea back to brinkmanship

북한이 '벼랑끝전술'로 돌아가다

-- 2월 6일 UPI Asia

출처: http://www.upiasia.com/Politics/2009/02/06/north_korea_back_to_brinkmanship/5413/

North Korea's recent bluster and saber rattling fit a pattern that the so-called rogue state has followed for decades in order to tame new administ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minding them that dealing with Pyongyang is a game of diplomatic hardball.

The communist country has created crises on the Korean peninsula whenever it wants to grab attention from new leaders and gain the upper hand in future negotiations, experts here say.

Once talks have started, the North slows the negotiations by slicing up the agenda and setting conditions for moving from one item to another in what analysts call "salami tactics," aimed at maximizing its gains at each stage. If the negotiating partner balks, it uses brinkmanship.

최근 북한의 거친 언사와 군사적 위협은 소위 '불량국가'의 미국과 남한 새 정부 길들이기와 그 궤를 같이하며, 새 정부들에게 평양과의 협상이 외교적인 게임이라고 상기시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 지도자의 주위를 집중시키고 장차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아젠다를 세부적으로 분해하고, (샐러미 전술이라고 불리는) 논제를 이동시킴으로써 협상을 지연시켜 각 단계에서 받아내야 할 것을 최대화한다. 이때 만약 협상 대상자가 물러나는 경우 북한은 '벼랑끝전술'을 사용한다 ……

NKorea tightens its economic grip, restricts market trading

북한이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 거래를 제한하다

-- 2월 12일 Bangkok Post

출처: <http://www.bangkokpost.com/news/asian/136481/nkorea-tightens-its-economic-grip-restricts-market-trading>

North Korea has clamped down on fast-growing free markets for fear they could undermine the communist state's power over its people, analysts and observers say.

The regime in late November banned general markets which sell consumer goods from early next year. It severely restricted

the operations of food stalls, according to the Daily NK web newspaper and other analysts.

The food markets known as "jangmadang," some of which currently open daily, will be allowed to operate just three times a month and to sell only vegetables and certain other farm products.

Staples such as rice and corn will be sold only at state distribution centres.

……

북한이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자유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Daily NK 온라인판에 의하면 지난 11월말 북한 정권은 내년초부터 소비자상품을 판매하는 보통시장을 금지하고 특히 식량의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한다. '장마당'이라고 알려진 현재 매일 열리는 식품시장은 한달에 3번만 열릴 것이며 채소와 약간의 농장생산물만 판매될 것이라고 한다. 쌀과 옥수수 같은 필수 농산물의 경우 국영상점에서만 판매될 것이다. 서울에 위치한 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통제는 실시하기 힘들 것이며 저항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強盛大国建設「孫の代にでも」= 北朝鮮紙が3代目世襲示唆か 강성대국 건설 「손자의 대라도」= 북한신문 3대째 세습 시사인가

-- 2월 12일 시사통신

12日の北朝鮮系ウェブサイト「わが民族同士」によると、同日付の労働党機関紙・労働新聞は「白頭山密営故郷の家の賛歌」と題する「政論」を掲載した。この中には故金日成主席、金正日総書記を継ぐ3代目世襲を示唆したとも受け取れる表現がある。ラヂオプレス (RP) が伝えた。

筆者はこれまで後継問題を示唆する政論を発表してきたソン・ミラン氏で、「(密営には)自分ができなければ息子が行い、息子ができなければ孫が行ってでも必ずやこの地に主体の強盛大国を建設するという白頭山將軍らの不屈の信念と意志が宿っている」などと力説している。白頭山將軍は金日成主席を指すとみられている。

라디오 프레스(RP)는 '12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의하면 같은 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백두산밀영 고향집 찬가」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총서기를 잇는 3대째 세습을 시사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다.

필자는 지금까지 후계문제를 시사하는 정론을 발표해 온 송미란으로, 「(밀영에는) 우리 대에 다하지 못하면 아들 대에 하고, 아들 대에 못다 한다면 손자 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이 땅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백두산 장군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머물고 있다」 등을 역설하고 있다. 백두산 장군은 김일성 주석을 지칭한다고 보인다.

추천 논문

북한의 자연재해 취약지 추정 및 남북협력 방안 연구

명수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거의 매년 보고되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의 주요 원인은 식량난으로 인한 다락밭 건설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벌목 등 산림훼손이다. 이에 북한 정부도 근래 조림사업 등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산림생태계의 황폐화는 심각한 토양유실을 초래하여 생태학적으로 성공적인 조림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북한 산림생태계의 황폐화와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후손들에게 번영의 기반이 될 건강한 자연환경을 넘겨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재해취약지 추정 결과, 재해취약지(다소 취약, 취약)는 북한 전체 면적의 35.1%에 해당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특히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그리고 평양과 남포 등의 남쪽 저지대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산림훼손이 일어난 곳이 재해에 취약했다. 상세 분석 대상지인 사리원 유역의 자연재해취약지 분석결과, 재해에 취약한 지역은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고, 근래 심각한 산림전용이 일어난 곳으로서, 토지이용의 변화가 재해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먼저 북한의 재해저감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남북협력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의 재해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림생태계의 황폐화이므로 무엇보다 북한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생태복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 충분한 기상관측 시설의 설치와 기상관련 정보 공유 등의 기상협력이 필요하며 또 남한의 IT 기술을 활용한 재해 예·경보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기후변화 심화에 대비하여 재해피해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남북기후변화대응위원회’와 같이 남북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공동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재해발생 원인에 비추어 볼 때 재해저감에 있어 간접적이기는 하나 장기적으로 재해저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산림황폐화를 초래한 다락밭 건설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생산 증대를 위하여 북한에 양질의 비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땀감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할 남북 공동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환경계획 등 북한의 정책 수립에 남한의 재해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 외의 남북협력방안으로는 북한 사회의 환경 인프라 구축 시 남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재해와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남북 공동의 환경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재해저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협력 사업들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등을 통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다각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kei.re.kr/kei/03_result/rs_result_view.jsp?brd_id=CTG00005BRD0000001&brd_num=713&keyfield=ALL&keyword=&sel1=&sel2=&sel3=&sel4=&sel5=&pgcnt=1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안 단신

북한, 월드컵 예선전에서 사우디 격파

○ 지난 2월 11일 북한 축구대표팀은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에서 사우디에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북한은 사우디를 26년 만에 격파한 것이다.

평양 청소년 학생들, 천리마제강소에 파철 지원

○ 지난 2월 12일 북한 중앙방송은 “올해 공동시설 관철을 위해 평양의 청소년 학생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방송은 “학생들이 좋은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 수백톤을 파철을 모았으며, 2월11일 만경대, 낙랑, 대동강, 모란봉, 중구역을 비롯한 10여개 구역 청소년들이 자동차에 파철을 싣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아갔다”고 설명하였다.